



|  |   |  |   |
|--|---|--|---|
| <br><b>국토교통부</b><br>Ministry of Land,<br>Infrastructure and Transport | <b>보 도 자 료</b>  |  | <br>경제의 틀을 바꾸면<br>미래가 달라집니다. |
|  | 배포일시  | 2016. 3. 7.(월)<br>총 5매(본문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담당 부서<br>토지정책과   | 담당 자  | • 과장 어명소, 사무관 권지희, 주무관 장혁<br>• ☎ (044)201-3399, 3401, 3409 |   |
| 보 도 일 시  | 2015년 3월 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8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 |  |   |

## 택지지구, 댐 등의 토지보상 현장조사시 드론을 활용한다 - 불법 보상투기방지 및 조사 효율성 기대 -

-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드론을 활용한 조사방법을 도입하기로 하었다고 밝혔다.
- 그동안 사업시행기관이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, 사업초기단계에 항공사진을 1회성으로 촬영·활용하고 직접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여 왔다.
  - 그러나,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저화질이어서 세부 물건 판독이 어렵고, 자주 촬영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법 보상투기 등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,
 

또한, 지형이 험난하여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왔다.
  - 이에 따라,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는 건축물 불법 증축이나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, 개집·양봉 등 불법시설물 설치,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 보상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, 불법시설물 철거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어 왔다.

- 국토부는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시 토지보상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, 불법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
  - 30만㎡ 이상의 중대규모 택지·산업단지나 댐 등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비용이 저렴하고 정확도가 높은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사진을 촬영하고, 이를 지번 및 지장물이 표기된 지적지형 중첩도와 연계하여 구축·활용할 계획이다.
    - \* 30만㎡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구나 도로·철도 등 線形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드론활용여부를 자체 검토하여 활용가능
- 국토부는 드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, 상반기중 2개 사업지구 (댐, 택지)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,
  - 드론활용 업무처리요령을 사업시행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하여 드론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부 관계자는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현장조사시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불법 증축 및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 보상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며, 사업지구의 효과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권지희 사무관(☎ 044-201-340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붙임 1

## 드론 촬영 등 참고 사진

### □ 항공 촬영 사진과 드론 촬영 사진 비교



항공 촬영 사진(50cm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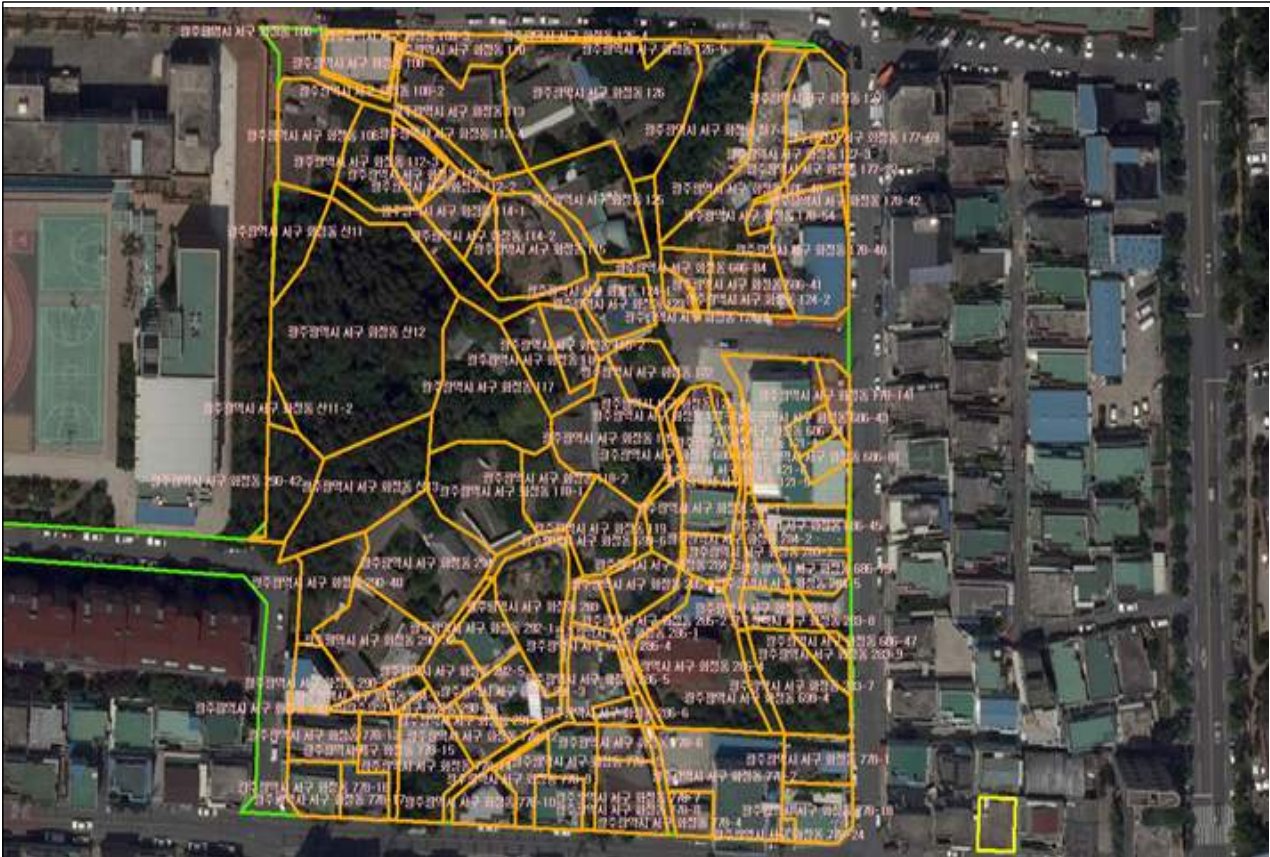


드론 촬영 사진 (5cm급)

### □ 드론 촬영 사진 [근접 촬영]



□ 공간정보 기술과 사진을 결합한 사례



□공익사업 현장에 불법 시설물 설치 사진 등



불법비닐하우스 설치



불법 양봉시설 설치



불법 시설물 설치